

여아, 카톡 압수수색·단통법 쟁점화

■ 법사위·안행위·미방위 국감

野 “온라인 공안시대” 총공세

與 “단통법, 가계 부담 부추겨”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단통법과 카카오톡 검열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포털 댓글 검열,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러한 검찰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카카오톡’ 등 SNS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강신형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다른 SNS인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작년 12월 8~19일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화기애애’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새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예방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달라질 정부-야당 관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정 총리와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면 검찰이 정치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유신공안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검찰의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언급하며 “문제가 되는 글은 검찰의 전담 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삭제 등 제재하는 게 현행법”이라며 “대통령 말씀이 있자마자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업체를 불러 협조 요청한 것은 사이버 공안정국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문제 및 검열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단통법이 애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계 통신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제 조사를 포함한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도 질의자료를 통해 “작년 우리나라 단말기의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 폰의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면서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포털 상시 모니터링’ 검찰 문건 공개 파장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에서 ‘명예훼손’ 글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검찰의 대책회의 문건이 13일 공개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인터넷 포털사(社)’에 임의로 명예훼손 글 등에 대한 삭제제를 직접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이 회의는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명의로 작성된 회의 문건에서 검찰은 ‘검도배경’으로 ‘9월16일 국무회의 대

통령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안이 쌓이게 돼 견집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의 문건에서 “검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의 활동 강화,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철저한 유포자 추적·검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해서 되겠느냐”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랑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원내부대표단 확정

이개호·김광진 의원 등 10명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선임 부대표인 이찬열 의원 등 10명을 원내부대표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대은 의원이 의원당당, 이개호 의원이 의사당당, 김광진 의원이 민원당당, 남인순 의원이 대외협력당당, 박남춘 의원이 기획당당, 김관영 의원이 법률당당, 백근기 의원이 안보당당, 김경협 의원이 정책당당, 전정희 의원이 여성당당 부대표를 각각 맡는다.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안규백 의원이, 원내대변인에는 박원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임명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국감 브리핑

장병완 “작년 국정원 인터넷 감청 1798건 42% 증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정원이 통신사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감청한 건수는 1798건으로 2010년(1269건) 대비 42% 증가했다. 인터넷 감청 대상에는 최근 논란이 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접속 IP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은 2009년 2025건에서

2010년에는 1269건으로 37.3% 감소했다가 2011년 1579건으로 반등한 뒤 매년 상승 추세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감청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와 다를 게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통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병윤 “4대강 미집행 5800억원, 예산 존재 알리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7조3962억원 중 2013년까지 총 7조3962억원이 집행됐고, 5818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집행 잔액으로 드러난 5818억원 중 4138억원은 각종 피해에 대응하는 4대강 유지·보수에 집행 중이다. 남은 1680억원은 유보 중이다.

오 의원은 “국토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미집행 예산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몰래 수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

한 피해보상 등 향후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실제로 국토부는 5818억원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바 있다”면서 “4대강 사업 예산 중 미집행금액이 있음에도 800억원 원금상환 예산을 신청한 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지부진…지역별 격차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 1483만 가구 중 45.9%인 681만 가구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다. 이는 2012년 34.9%에서 1년 6개월여 사이 11.0%포인트 오른 데 그친 것이다. 지역별 디지털 전환율도 서울 65.7%, 인천 60.

5%, 부산 52.6%, 경기 48.1%, 강원은 48.0%인 반면 대전은 9.5%, 광주 13.9%, 전남은 28.6%에 각각 머무는 등 지역별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사위 ‘사이버 망명’ 책임 논란

임내현 “텔레그램 가입자 150만명”

‘사이버 사찰’에 이어 ‘사이버 망명’에 대한 책임 소재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방침 발표 후 촉발된 ‘사이버 망명’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름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거나 대한민국 속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

판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카톡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입하고 싶겠느냐”며 최근의 사이버 망명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민에게 외면 받으며 버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어 “텔레그램 한국인 가입자만 150만명에 이르고 급히 한국어 버전까지 출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승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감정가보다 20% 값싸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청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자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5층 참조은 인파

4층 한길 통증 약학과

2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5층 참조은 인파

4층 한길 통증 약학과

2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 3.5%~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내차, 원룸, 전·달·모텔
대출한도 : 최고 80%(여제신용보증)
상환특징 : 상환비 면제 / 대환우대
상환방법 : 일시상환 (미납시소통장 가함)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인감도장, 신분증

02 햇살론대출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자격 : 신용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저영업자 및 근로자
대출한도 :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 연 8.01% (아예변통금리)
보 증 료 : 대출금리 0.95%(서영정지), 0.90%(근로자)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 최저 4.0%~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상환방법 : 일시상환 (미납시소통장 가함)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인감도장, 신분증

04 저영업자, 직장인 전문직 신용대출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자격 : 저영업자 및 직장인, 전문직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최저 5.0%~
대출기간 : 최장 5년
특별우대 : 대출금리 금리 추가 인하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18개월 3년

최대 2.5%

1년 2년 3년

2.85% 2.9% 2.9%

단, 하루를 맡겨도 앞찬예금 (당일에 따라 차등 적용)

3.1% 3.2% 3.3%

대인본점

충장지점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223-7217
223-7218

충장지점